

중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현주(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제1장 민본사상의 나라 중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와 같은 시기, 중국은 부족국가를 거쳐 왕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왕정국가였다. 서양에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 등 여러 정치체제를 두루 경험하고, 중세가 지나서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등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서구식 정치모형을 개발한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일관되게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줄곧 왕정이 지속되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하(夏) 왕조가 통치하던 시기는 기원전 21세기부터 기원전 16세기 까지라고 하니, 중국에서 왕정이 시작된 시기는 신화의 시대인 셈이다. 하 왕조의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자에 의해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만큼 중국 고대의 하 왕조는 무척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하 왕조는 폭군 걸(桀)에 의해 쇠퇴하여, 상(商)(혹은 은(殷)) 왕조의 탕(湯)임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상 왕조는 또 다시 폭군 주(紂)에 의해 민심을 잃고 주(周) 왕조의 무(武)임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무수히 많은 왕조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동안, 고대 중국에서는 평등한 시민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정치는 물론 일정한 계급에 의해 전유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왕과 귀족들과 같은 통치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정치에 민심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서양의 ‘민주’사상과 구별하여 ‘민본’사상이라고 부른다.

민본사상은 하(夏), 상(商), 주(周) 시대부터 시작되어 춘추전국시대에 특히 발달하였다. 춘추시대 말기의 민본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이다. 공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논어』에는 “백성을 중히 여겨라(重民)”, “백성을 사랑하라(愛民)”, “백성에게 베풀어라(惠民)”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민본사상을 엿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는 농업사회로서 생산력을 책임지는 백성이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자 민본사상의 뛰어난 점은 백성을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덕(德)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人)”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공자의 사상을 인본주의(휴머니즘)라고도 한다. 그가 자신의 집 마구간에 불이 났다고 제자가 달려와 알리자, 사람이 다쳤는지를 먼저 물었다는 일화는 그의 인본주의적 정신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人)”이라는 개념보다는 “백성(民)”, “군자(君子)”, “선비(士)”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개념들이 더 자주 사용되었고, 사람을 주로 계급적, 신분적으로 통치의 주체와 대상으로만 봄으로써 인간 자체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자는 “자신이 서고 싶으면 사람을 세우고, 자신이 이르고 싶으면 사람이 이르게 하라(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라고 하면서, “사람(人)”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

때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루 뜻하는 것으로, 사람 일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자의 사상을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써 제시되기도 하지만, 공자 이전의 “民”의 개념과 비교하면,¹⁾ 상대적으로 대중의 위치를 제고시킨 휴머니즘적 민본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자는 “배워서 우수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學而優則仕)”고 하면서 신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고, 배움에 있어서 신분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고대 농업사회인 중국에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도덕이 확립되게 된 것이다. 사실상 그 본질은 물론 국가권력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군주에 대한 충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군주의 권위가 백성들의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 민본사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맹자이다. 어떤 이는 맹자의 철학적 지위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비교하기도 할 정도로 맹자는 중국 사상사에서 공자에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다. 맹자는 공자의 민본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하는 ‘백성을 군주보다 중시하는(民輕君貴)’ 주장을 하였다. 그는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정치, 즉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설파하였다. 맹자가 생존했던 전국시대 당시에는 군주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군주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였고, 전쟁이 빈번하여 국가들 간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욱 강대해져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무척이나 파격적인 것이었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민본사상은 이렇듯 국가의 근간이 백성임을 밝힌 선진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사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민주사상은 그 주체가 시민이지만, 민본사상의 주체는 군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의 근원이 시민이며, 국가는 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면, 민본주의에 있어서,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군주에게 있으며,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고, 백성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은 결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해, 민본은 ‘위에서 아래로’의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는 그와 달리 ‘아래에서 위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로소 민본사상이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를 접하게 된 것은 19세기 청나라 말기에 서구사상이 전해지면서이다. 중국에서 “민주”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북경 동문관(同文館)에서 1864년 출판한 헨리 위튼(Henry Wheaton)의 『만국공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에서이다. 그러나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정위량(丁韪良, 본명 W. A. P. Martin)이 사용한 “민주”라는 단어는 오늘날 공화국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republic”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 후 1872년 왕지(王芝)가 『해객일담(海客日譚)』에서 처음으로 “democracy”를 “민주”라고 번역하였다. 그 후 광서(光緒) 6년(1880년) 정관응(鄭觀應)이 『역언논공법(易言論公法)』에서 “서양에는 군주국가도 있고, 민주국가도 있고, 군민공주(君民共

1) “民”이 현대에서의 “인민”, “국민” 등의 의미로 쓰인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主)국가도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서양의 민주주의를 알렸고, 엄복(嚴復), 양계초(梁啓超) 등을 비롯한 많은 중국 근대의 지식인들이 “민주”를 부르짖기 시작함으로써 중국에서 민주, 자유, 권리 등 현대적 가치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제2장 중국 근대의 다양한 민주주의 주장들

제1절 엄복(嚴復)과 민주주의

19세기 청나라 말기 중국인들에게 서구의 입헌사상과 민주사상을 전파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엄복(嚴復)이다. 영국의 왕립해군학교에 유학했던 그는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천연론(天演論)』(『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원부(原富)』(『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젠크스(E. Jenks)의 『사회통전(社會通詮)』(『정치사(A History of Politics)』),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자유론(On Liberty)』), 몽테스키외의 『법의(法意)』(『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을 번역하여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의 번역들은 근대중국에 서구계몽사상이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말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방국가들의 군사와 기술 등 물질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사상과 윤리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서양보다 더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청말 동치년간(同治年間: 1861년-1874년)에 추진되었던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이다. 그러나 엄복의 생각은 중체서용론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서구문명의 우수성을 자유와 민주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에서 발견하였다. 서구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온 엄복은 『사회통전』에서 중국의 사회를 “종법사회”, 즉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서구사회의 경우 모든 일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지만, 중국사회는 “조정에서는 관직을 중시하고, 고향에서는 나이를 중시”하는 전통적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사회는 토털사회에서 출발하여 종법사회로, 그리고 군국사회(또는 국가사회)로 단계적으로 진화한다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엄복은 중국사회도 종법사회에서의 낡은 법과 제도, 그리고 진부한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국가사회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만이 중국이 강한 나라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나아가 그는 중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民力)”을 키우고, “국민의 지혜(民智)”를 일깨우고, “국민의 덕(民德)”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 “민덕”을 새롭게 하는 일은 중국의 전통적 도덕의 불평등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는 중국의 봉건적 도덕관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중국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약자가 되도록 만든 원흉이므로, 그것을 버리고 자유, 민주, 평등 등 서구 계몽운동의 이념들을 기초로 새로운 도덕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로써 대중의 힘을 키워 중국이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개인의 자연권을 출발점으로 삼았던 사회계약론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을 약자가 강자의 먹이가 되는 약육강식으로 설명하는 사회진화론을 통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엄복은 자유야말로 민주정치의 내재적 본질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서구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를 본연(體)으로, 민주를 외연(用)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서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 자유는 자주독립성을 보장받는 국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민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 자유의 실현이란 곧 입헌정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의미하였다. 엄복은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혁명주의자들과 달리 공화정을 지지하지 않고 입헌군주제를 원했지만, 군주의 권력은 신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양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홉스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군주도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군주도 국가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국가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국민의 소기(小己)의 자유를 모아, 그로써 국가 전체(國群)의 자유를 이룬다”²⁾고 생각했다. 그는 국군(國群)의 자유와 소기(小己)의 자유를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사회와 국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자유”라는 개념을 동양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또는 “국가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엄복은 그와 더불어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의 독립이란 의미도 자유개념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근대중국이 서구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강한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엄복은 그 해답을 자유와 민주, 법치 등 서구 계몽사상의 가치들에서 찾았고, 그의 사상은 근대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서구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제2절 손문(孫文)의 삼민주의

1894년 중일갑오전쟁이 발발하자 광저우에서 자신의 진료소를 운영하던 손문은 진료소 문을 닫고 급히 상해로 향했다. 그것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홍장(李鴻章)에게 상서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상서에서 유럽이 부강해진 이유는 강한 무기와 함선, 그리고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땅, 재화, 화폐,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한 것 때문이므로, 중국이 서구의 방식을 모방하여 부강해지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우선시해야 한다³⁾고 주장했다. 이것은 기존의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문의 이런 주장은 이홍장에게 거절당했고, 그 후 손문은 하와이로 가서 흥중회(興中會)⁴⁾를 결성하여 자신이 직접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의 무장봉기 끝에 혁명세력에 의해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 수천 년간 지속되어오던 봉건통치가 드디어 무너지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이 실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

2) 嚴復, 群己權界論, 北京: 商务印書館, 1981.

3) 孫中山, 上李傅相書, 孫中山全集, 第一卷, 北京: 中華書局, 1981, p.8.

4) 흥중회는 1905년 화흥회(華興會), 광복회 등과 함께 중국동맹회(약칭 동맹회)를 결성하였다.

화민국으로,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그 초대 총통이 바로 손문(孫文)이다. 이로 인해 손문은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에게는 민주혁명의 선구자 또는 중화민국의 “국부(國父)”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불문법인 영국의 헌법과 성문법인 미국의 헌법 모두를 거부하고 중국만의 새로운 입헌주의, 즉 “오권분립”을 주장하는 오권헌법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오권(五權)”이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외에, 규찰권(糾察權)과 고선권(考選權)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규찰권과 고선권은 각각 감찰제도와 고시제도를 의미한다. 손문은 서구의 삼권분립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중국 고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감찰제도와 고시제도를 통해서 보완·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과 서양 제도의 융합을 통해 그는 독재로 흐르지 않고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제약하는 독자적인 권력분립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손문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오권분립론보다는 “삼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삼민주의란,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주의를 말한다. 중국 국민당이 기본강령으로 삼았던 삼민주의 중 민족주의는 만주족을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척하는 “반만(反滿)”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손문을 비롯하여 청조의 전복을 목표로 했던 혁명파들은 “오랑캐를 무찌르고, 중화를 회복하자”는 구호를 내세워 혁명을 준비했다. 청조는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봉건왕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청조는 오랑캐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 동시에, 봉건적 독재세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신해혁명에 의해 청조가 무너진 후, 이들의 민족주의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과 서구열강을 타도하고자 하는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민권주의는 일반적으로 삼민주의의 핵심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 이유는 민권주의를 통해 혁명의 목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06년 『중국동맹회혁명방략(中國同盟會革命方略)』에서 그는 “비록 세상이 복잡하지만, 그 일관된 정신은 즉 자유, 평등, 박애”이며, “이 세 가지 주의(삼민주의)의 내용은 또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⁵⁾과 더불어 자유, 평등, 박애일 따름”⁶⁾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삼민주의는 서구 계몽사상의 천부인권과 자유평등론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중국식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생주의는 손문사상의 사회주의적 일면을 보여준다. 그는 “평균지권(平均地權)”-토지국유를 통한 토지의 공동소유-와 “절제자본(節制資本)”-자본통제를 통한 계획경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문의 삼민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중국사회가 사회주의로 전환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오사운동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중국 현대사상가인 왕휘(汪暉)는 오사시기를 중국지식인들에게는 “황홀한 꿈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것은 오사 신문화운동이 사상의 자유, 인성의 해방, 이성의 회복 등을 전 중국에 알린 계기이기 때문이다. 장호(張灝)가 말

5) 1921년 6월 『三民主義之具體辦法』라는 연설에서 손문은 삼민주의를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과 상통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중문으로 번역하면 민유, 민치, 민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는 그 의미를 국가를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며, 공동으로 누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6) 孫中山. 軍政府宣言[A]. 孫中山選集[M]. 北京：人民出版社, 1981, p.77.

했듯이, “오사” 이후 중국에서 민주와 자유는 모든 정치와 문화운동의 공통적 구호였다.⁷⁾ 그런 이유로 오사운동을 계몽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오사운동이 “민주”와 “과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기치로 전통적 봉건질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걸맞은 사상적 무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죄와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 전승국들은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시의 원세개(袁世凱)의 북양(北洋)정부⁸⁾는 산둥, 남만주, 내몽고 등의 권익에 대한 일본의 21개 조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강화회의에 참가했던 양계초가 그 사실을 알고 서둘러 본국에 알렸다. 진상을 알게 된 중국 민중은 분개하여 1919년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대대적으로 반일시위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오사운동은 단순한 애국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 후 중국에서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 및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을 신문화운동이라고 부른다. 신문화운동은 “중국의 르네상스”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적 사상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상과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진정한 근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진독수(陳獨秀)는 민주와 과학을 신문화운동의 양대 기치로 삼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각각 “democracy”와 “science”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이용하여 “더(德)선생”과 “싸이(賽)선생”으로 의인화하여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신청년』이라는 잡지에서 「신청년 죄안의 답변서(《新青年》罪案之答辯書)」라는 글을 통해 신청년에 반대하는 사람은 공교(孔敎), 예법(禮法), 국수(國粹), 정절(貞節), 낡은 윤리, 낡은 예술, 낡은 종교, 낡은 문학, 낡은 정치를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더선생(democracy)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1915년 진독수는 과학과 인권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그는 『청년잡지』에서 「청년들에게 고함(敬告青年)」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의 청년들에게 6 가지를 요구했다. “자주적이어서야 하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이고 보수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취적이고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세계적이고 쇄국적이어서는 안 된다.” “실리적이어서야 하며 실속이 없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어서야 하며 허황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여섯 가지를 주장한 것은 청년들에게 과학과 인권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를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는 젊은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과학과 인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꺼리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지 않고 남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려는 수동적이고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란 것이다.

“나에게 손과 발이 있는데, 스스로 따뜻하고자 한다; 나에게 입과 혀가 있는데, 스스로 좋

7) 張灝, 重訪五四——論“五四”思想的兩歧性, 許紀霖編, 二十世紀中國思想史論, 上卷, 東方出版中心, 2006, p.7.)

8) 중화민국의 초대총통이었던 손문이 총통의 직위를 원세개에게 양위한 이후, 1912년부터 1928년까지 북경에 있었던 중화민국의 정부를 말한다. 사실 북양이라는 말은 청나라 말기 선양, 직예, 산둥일대를 일컬었던 말이었으나, 국민당 북벌 이전에는 북양은 북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 나쁜 것을 판단한다; 나에게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스스로 믿는 것을 따른다; 절대 다른 사람의 월권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지도 않는다: 무릇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 모든 권리, 모든 신앙을 자신의 고유한 지능으로 결정하지, 절대 맹목적으로 타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⁹⁾

진독수를 비롯한 근대의 선진적 지식인들은 젊은이들이야말로 새 시대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일어나야 새로운 중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과거의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야 했다. 오사시기 많은 젊은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고,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자신들이 나라와 민중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갈 길을 비추어 준 것은 오사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오사지식인들이 원했던 새로운 사회는 바로 민주사회였다. 민주사회의 건설은 무지한 국민들이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시대를 벗어나고자 하고, 무지한 국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빨리 일어나 과학과 인권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¹⁰⁾고 외쳤다. 그는 「프랑스인과 근세 문명」이라는 글에서 프랑스의 역사가인 샤를 세노보(Charles Seignobos)의 말을 인용해서 인권에 대해 설명하였다.

“옛날의 법률은 귀족의 법률이다. 인류가 불평등한 계급으로 구별되어, 각자가 그 신분을 지키도록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민주 사회이다. 사람들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다. 불평등은 비록 전부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재산에 대한 사사로운 불평등뿐이며, 공적인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다.”¹¹⁾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사 지식인들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¹²⁾ 20세기 중국에서 이루어진 자유와 민주에 대한 요구는 그 의미가 크다. 물론 그들의 요구는 좌절되었지만, 당시의 중국의 지식인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도 민주와 자유를 거부감 없이 자신들의 천부적인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민주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바람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졌으며, 그 실현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인권논전(人權論戰)

근대중국에서 인권논전의 계기가 된 사건은 국민당의 “훈정(訓政)” 선언이다. 1928년 8월

9) 陳獨秀, 敬告青年, 陳獨秀著作選, 第1卷, 上海人民出版社, 1993, pp.130~131.

10) 陳獨秀, 敬告青年, 陳獨秀著作選, 第1卷, p.135.

11) 陳獨秀, 敬告青年, 陳獨秀著作選, 第1卷, p.137.

12) 오사시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대의제를 통한 민권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화제였다.(肖高華, 五四時期知識界的民主政制設計及論爭, 連雲港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1年 9月 第3期。)

15일, 장개석(蔣介石)의 주최 하에, 국민당은 남경(南京)에서 제3차 오중전회(五中全會)를 개최하고, “훈정(訓政)”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내용은 국민당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국민대회를 대표하여 국민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정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당이 국민을 훈련시켜 점진적으로 “선거, 파면, 창제, 감찰 4가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 날, 국민당은 장개석을 국민정부의 주석 및 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929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국민당은 남경에서 제3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훈정시기 중화민국 최고근본법”을 결의하고, 훈정시기 필요하다면 “인민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약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영미식 민주정치를 꿈꾸었던 호적(胡適) 등은 『신월(新月)』이라는 잡지를 통해 「인권과 약법」, 「우리는 언제나 헌법을 갖게 될까」등을 발표하여 국민당정부의 훈정에 반대하였다. 호적, 나용기(羅隆基), 양실추(梁實秋) 등은 모두 평사(平社) 즉, 중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를 주축으로 국민당을 비판하였다. 본래 페이비언 협회는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호적, 나용기 등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국민당정부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진지로 삼았다. 그들은 국민당정부가 “반동분자”, “약덕 지방유지(土豪劣紳)”, “반혁명”, “공산주의자” 등의 명목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인민은 반드시 재산권, 노동권, 교육권, 사상,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국가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국민당이 추진하였던 “훈정”은 헌법도 임시약법도 부정한 일당독재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나용기는 「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원하는가」라는 글에서, 국민당의 “훈정”은 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독재정치라고 비판하면서, 훈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당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무력 통일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1928년 8월 국민당 제2회 오중전회는 훈정약법을 제정한다고 선언한 이후, 1931년 5월 국민회의에서 드디어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을 통과시켰다. 나용기는 「비평」이라는 글에서 약법은 “‘주권재민’이라고만 쓰인 허문(虛文)이며, 인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 인민에게 권리를 “왼손으로는 주고, 오른손으로는 빼앗는” 눈속임에 불과하며,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당정부는 참을 수 없었다. 곧바로 신월서점에 경찰을 파견하여 수색하고 점원을 잡아갔다. 국민당정부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권논쟁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제5절 민주 vs. 독재 논쟁

민주와 독재 논쟁은 1933년 12월 10일 『독립평론』 제80호에서 「혁명과 전제」라는 글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장정불(蔣廷黻)의 글로, 전제정치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은 호적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그 글이 실렸던 『독립평론』은 물론이고, 『동방잡지』, 『국문주보(國民週報)』, 『재생(再生)』 등 당시에 영향력 있던 잡지들에 반대하는 글을 실으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그 후,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다: 독재파/민주독재파와 민주파, 그리고 중간파. 독재파/민주독재파 진영에는 장정불, 전단승(錢端升), 그리고 정문강(丁文江) 등이, 민주파 진영에는 호적, 도맹화(陶孟和), 장계약(張奚若), 호도유(胡道維) 등이 있었으며, 그 경향은 독재파보다는 민주파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중간파 진영에는 진지매(陳之邁), 장불천(張佛泉), 오경초(吳景超) 등이 있었다.

민주와 독재 논쟁은 193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짧은 논쟁이었지만, 당시 중국 문화와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논쟁으로서, 향후 중국인민이 왜 인민독재를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한 독재론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위기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쉽게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초는 국민당이 훈정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시기이다. 이 시기 국민당 내부에서는 무술리니식의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 중에는 일찍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자유주의자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주가 아닌 독재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당시 중국의 국내외 상황 때문이었다. 1930년대 중국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때였다. 특히 국민당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대내적으로, 국민당의 중국내에서의 입지는 막 성장하기 시작한 공산당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중국침략으로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독재를 주장했던 지식인들이 당시 국민당의 훈정에 전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란을 잠재우고 외세에 대항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당 정부에게 독재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장정불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이 모두 건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행복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혁명과 전제」에서, 중국은 수천 년간 전제정치를 했지만 “불행히도……환경이 특수해서,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함으로써, 과거 봉건시대의 전제는 진정한 독재가 아니며, 현대화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 진정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의 독재는 안 되지만, 나의 독재는 된다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일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낙관론이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졌다. 그것은 “불행히도……환경이 특수해서”라는 점에서 일종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많은 지식인들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에 대해 호적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즉각 반박하였다. 그들은 통일, 건국, 공업화 등은 모두 당시 중국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목표들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독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호적은 『독립평론』에서 「건국과 전제」, 「건국과 전제를 다시 논함」이란 글을 통해, 서구의 근대화가 군주의 힘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나아가 그는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민계급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재를 실행한다면 관료적 권위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수천 년간 전제정치를 실시해 왔

13) 그들에게 국가의 위기는 자유, 민주와 같은 가치들보다 부국강병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趙穗生, 中國民主悲劇深淵, 知識分子, 1990年冬季號)

는데, 왜 아직까지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했는지 되물으며, 구식 독재와 신식 독재가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국과 전제를 다시 논함」에서, 호적은 독재를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 중국에는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람, 계급,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정치는 상식적인 정치이지만, 개명전제는 엘리트의 정치”인데, 엘리트는 양성하기 어렵지만, 상식은 가르치기 쉽다는 것이다. 듀이의 정치철학에 영향을 받은 호적이 생각하기에, 민주정지만큼 국민을 훈련시키기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호적의 생각에 대해 고흔(顧昕)은 “유치원식의 민주관”이라고 비판했는데¹⁴⁾, 독재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재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후에 오히려 인민독재를 정당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까지 하였다. 특히 호도유(胡道維)는 「중국의 기로(歧路)」에서 독재를 전제와 구분하였는데, 독재는 법치이고 전제는 인치이며, 독재는 과정이며, 수단이지만, 전제는 결과이며,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 그는 정문강이 주장한 신식 독재가 중국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를 단체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가 중국에는 없기 때문이며, 독재는 민치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호도유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독재는 “노동대중의 독재”, “전인민의 독재”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호도유는 독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당의 독재를 반대한 것이었다. 또한 국민당의 독재가 전제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독재를 비판한 호도유는 법치와 민치를 기초로 한 독재라면 용인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이후에 모택동이 주장한 인민민주독재의 논리적 기초를 마련한 셈이었다.

제3장 모택동의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

1949년 6월 30일 중국 공산당 28주년 기념식에서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1840년 아편전쟁이 실패한 이후, 선진적인 중국인은, 천신만고 끝에, 서방국가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다. 홍수전, 강유위, 엄복, 그리고 손중산은 중국공산당이 탄생하기 이전 서방에서 진리를 찾았던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 때, 진보적인 중국인들은 서방의 새로운 지식이라면 어떤 책이라도 보았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국내에서 과거를 폐지하고, 우후죽순격으로 학교를 세우고, 서방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 나 자신도 청년 시기,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그것은 서방 부르주아 민주주의 문화였다. 즉 당시의 사회학,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새로운 학문이란 것

14) 顧昕, 民主思想的貧瘠土壤——評述一九三〇年代中國知識分子關於“民主與獨裁”的論戰, 許紀霖編, 二十世紀中國思想史論, 上卷, 東方出版中心, 2006, p.379.

15) 胡道維, 論專制與獨裁, 獨立評論, 第90號, 1934年 3月 4日, pp.5-11.

은, 중국 봉건주의 문화 즉 낡은 학문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침략은 서구의 학문을 배우려는 중국인의 꿈을 부수고 말았다.”¹⁶⁾

모택동은 물론이고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세워진 세계 최초의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중국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19년 중국에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1921년 중국공산당이 성립하였다. 손중산은 10월 혁명 이후 중국공산당과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손중산이 죽고, 장개석이 국민당의 정권을 계승하였으며, 중국 공산당과 반목하였다. 그리고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 중국공산당은 일본을 몰아내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3년에 걸쳐 인민해방전쟁을 하여 승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구의 자본주의 문명,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등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었다.

인민민주독재(중국어로는 인민민주전정)라는 말은 바로,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드디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된 1949년 6월 30일 모택동이 「인민민주독재를 논한다」(앞의 연설)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인민민주독재국가임을 선포하고, 그 주도세력이 노동자계급임을 밝힌 이후,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인민민주독재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독재의 특수한 형태이다. 중국 사회주의는 유럽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할 당시의 중국은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중국이 전통적인 봉건적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무산계급혁명을 성공시킬 만한 힘이 노동자계급에게는 없었다. 당시 반봉건상태인 중국의 노동자 계급은 200만에 불과했고, 농민이 전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은 농민은 물론이고, 지주, 지식인이나 자본가 등을 포함한 사회 각 계층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소련과 달리 무산계급독재라고 말하지 않고, “인민”민주독재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인민민주독재는 마치 모든 중국인을 위한, 모든 중국인에 의한 통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산계급의 영도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암시하고 있었다. “독재”를 용인한 결과,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물론이고, 1989년 천안문 사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인이 “독재”의 칼날에 희생당하고 고통 받아왔다. 그리하여,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헌법에서 인민민주독재라는 조항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4장 중국 민주주의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16) <http://www.jswl.cn/course/maogai/wx/lrmmzzz.htm>

제1절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식 민주주의

중국은 항상 서구와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구별하여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고 부른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주의하의 시장경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개념인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2004년 타임즈(The Times)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조수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영국 런던 외교정책센터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을 가리켜 명명한 것이다. 라모에 의하면, 중국의 정세와 사회적 필요에 적합한 중국식 발전모델을 통해, 중국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국제 등 각 방면의 문제를 두루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영역에서 중국이 이룬 성과로 인해 발전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서구식 발전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였으나, 자유와 평등, 법치,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여긴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지킬박사와 하이드로 비견되기도 한다.¹⁷⁾

서구사회는 중국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로 경제성장만 중시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왔지만, 중국은 그것을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 왔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정치적 영역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도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민주주의 또한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중국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주도적 위치 또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당내민주의 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실질적으로 당내민주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왔다. 중국은 경제적 개혁과 더불어 일련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제도개혁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통치능력을 강화하고 체제의 안정을 실현해 왔다. 중국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실현을 21세기 당(공산당)이 직면한 중요한 정치적 임무”¹⁸⁾라고 규정하고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이 성립한 이래, 공산당과 당 지도부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는데, 결국은 문화대혁명, 천안문사태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당내민주의 실현은 공산당 권력의 분권화, 권력의 개인화와 관료주의화의 극복, 당과 국가기구

17) 스테판 할퍼, 권영근 옮김, 베이징 컨센서스, 서울: 21세기북스, 2011.

18)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奪取全面建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廣州日報(2007年10月16日)(http://gzdaily.dayoo.com/html/2007-10/16/content_65199.htm)

의 기능적 분리 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법치(依法治國)를 내세워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선거와 민주감독 등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당내민주란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권력남용과 당 지도층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식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민주와 협상민주가 결합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두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에서 내세우는 당내민주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정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¹⁹⁾ 실제로 당 내에 오랜 동안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개방 이후 진행되어 온 경제적 자유화로 인해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어떤 이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간부의 부패가 지금보다는 덜 했다고 말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법치를 강조하였다. 그러한 의지는 『중국의 민주정치건설』(2005년), 『중국의 정당제도』(2007년), 『중국의 법치건설』(2008년) 등의 백서로 나타났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특색 민주주의를 위해 당의 영도, 인민주권, 법치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²⁰⁾ 그는 “민주 없이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하였고, 원자바오 총리 또한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또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였다.²¹⁾ 그는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층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무를 공개하고, 인민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은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백서들이 밝히고 있는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내용 때문이다. 백서는 중국특색 민주주의가 네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즉, 공산당 지도하의 인민민주주의, 인민주권,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 민주집중제이다. 이것은 또한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 법치 원칙의 통일을 통해서이다. 둘째,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이다. 셋째,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인민생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주권, 영토보전, 존엄에 유리해야 한다.²²⁾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산당의 영도”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에서 실현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전체 인구(2021년 14.1178억)의 약 14.8%(2021년 9514.8만 명)에 불과한 공산당이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해 중국 내의 진보적인 학자들은 부정적이다.

그런 회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기한 것이 바로 심의민주 또는 협상민주이다. 서구에서의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19) 劉軍寧, 中國政治體制改革: 黨內民主, 抑或憲政民主? (朱學勤編, 為生民立命, 天地圖書有限公司, 2009)

20) 胡錦濤, 胡錦濤在省部級主要領導幹部提高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能力專題研討班上的講話, 新華網(2005年 2月 19日)(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06/26/content_3138887.htm)

21) http://news.xinhuanet.com/misc/2007-03/05/content_5801945.htm

22) <http://news.sina.com.cn/c/2005-10-19/11208053056.shtml>

의미한다. 그러나 심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을 의사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제도와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언론통제 국가이므로,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사회 각 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법치와 민주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현을 위한 전략, 즉 당내민주를 통한 인민민주의 실현, 점진적인 사회주의 민주주의 추구라는 카드는 중국 인민들의 요구를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우편향, 정치좌편향”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홍콩 민주화시위와 중국 민주주의의 미래

2014년과 2019년 홍콩의 민주화시위로 여론이 들쭉거렸다. 2014년 홍콩시민들이 외친 것은 홍콩 최고위직인 행정장관 량전잉(梁振英)의 퇴진과 시민투표를 통한 새로운 행정장관의 선출이었고, 2019년은 중국에서 발생한 범죄용의자로 지목된 홍콩 거주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도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였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1843년 아편전쟁에 진 중국이 난징조약을 체결하여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 이래 줄곧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반환협정에 의해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협정에 의하면, 중국은 반환시점인 1997년부터 50년 간 홍콩의 기존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홍콩 주민에게 고도의 자치를 인정해야 했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공존을 모토로 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해 홍콩의 현행 체제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14년 8월 31일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북경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의 후보자격을 친중(親中)인사로만 제한할 것을 발표한 이후, 홍콩에서는 홍콩의 중심지인 “센트럴”을 중심으로 그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전인대는 각 분야의 대표로 이루어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도 2-3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²³⁾ 이러한 발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본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홍콩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초 홍콩이 반환될 당시 홍콩시민들은 이런 일을 우려하여 반환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 다시 말하면, 최대한의 자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중국의 선거 개정은 결국 그러한 약속을 어긴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화가 난 홍콩시민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완전한 자유 직선제”를 요구하고,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23)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1_0013143219&cID=10102&pID=10100

홍콩의 민주시위로 인해, 중국정부의 입장은 본토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중국정부는 본토인이 홍콩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 검열하여 철저히 본토에서 홍콩의 민주화시위에 호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홍콩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결국 향후 전 중국의 민주화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태를 지난 천안문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강압적 방식으로 진압한 점에서는 같다. 철저히 통제되었던 베이징과는 달리,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막기 위한 홍콩경찰의 최루탄 가스에 맞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하여, “우산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홍콩의 시위는 이미 전 세계 민주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홍콩의 시위상황은 뉴스와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매 시간 전 세계에 전해졌다. 그 여파로 홍콩의 민주화시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한 세계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중국에서 중국식 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민주주의는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었다.